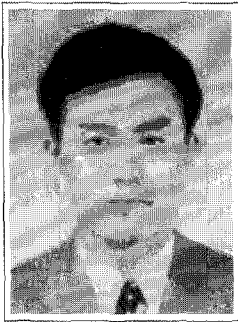


제8차 NPT 평가회의 결과와 향후 전망

권희석

미 몬테레이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미 에모리대 정치학과 수학
외무고시 합격 및 외교부 입부
(1986)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주레바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장, 주오스트리아 대사
관 참사관(IAEA) 역임
미 몬테레이 연구소 객원연구원
(’09 ~ ’10년)

개관 및 8차 회의 맥락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이행 상황을 5년마다 점검하는 NPT 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가 지난 5월 3일 ~ 28일 4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핵심 사안에 관한 합의 사항을 담은 최종문서(Final Document)를 채택했다.

2005년에 개최된 지난 평가회의에서 미국 등 핵보유국과 비동맹을 중심으로 한 비핵국간 심각한 견해차로 인해 합의문서를 채택하지 못했던 전례에 비추어, 금번 회의의 성공은 한동안 군축, 비확산 분야 전반에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하다시피 1968년 성안된 핵비확산조약은 서로 긴밀히 연관된 3개의 지주(pillar) 위에 성립되어 있는데, 핵군축(6조), 핵비확산(1,2,3조), 평화적 핵이용(4조)이 바로 그것이다.

비핵국들은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핵무기를 절대로 취득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이에 대해 5대 핵보유국(미, 영, 불, 소, 중)은 핵무기의 감축, 폐기 조치에 관한 협상을 성실하게(in good faith) 추구해 나가겠다고 공약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 선진국인 핵보유국들은 비핵국의 핵무기 불취득 공약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대부분 개도국인 비핵국들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핵보유국과 비핵국 간의 상대방에 대한 공약은 ‘대타협(grand bargain)’이라고 불리면서 서로 미묘한 균형(delicate balance)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3개 지주 가운데 1개의 이행이 취약하면 여타 지주의

이행도 부정적 영향을 받아 왔다.

예컨대, 지난 10년간 핵보유국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이란 등 비핵국들의 핵확산 사례를 거론하면서 핵비확산 조치 강화에 심혈을 기울인 반면, 비핵국들은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이 부진함을 지적하면서 핵비확산 조치를 추가하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측 간에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심대한 인식의 차가 존재해 왔던 것이다.

더구나 핵비확산조약이 1960년대 국제 안보 상황 및 국가 간 역학 관계를 반영하여, 비핵국의 핵무기 불취득 공약을 감시하는 임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부여하면서 IAEA와 각국 간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핵보유국의 의무 사항인 핵군축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를 감시하는 기구나 메커니즘도 규정하지 않아, 이른바 핵보유국과 비핵국간 ‘의무의 불균형(imbalance of obligations)’을 야기하였으며, 양측 간 핵군축 조항인 6조에 대한 해석과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를 노정했다.

이에 따라 비핵국은 각종 국제 안보 포럼에서 핵보유국의 핵군축 진전을 최대 과제로 삼아 왔으며, 과거 NPT 평가회의에서도 6조 문안 자체를 수정하기는 어렵지만 평가회의의 결정을 통해 핵보유국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핵군축 조치를 부과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금번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슬로건에 힘입어 핵폐기에 시한을 정하고(예: 다수국이 2025년 주장), 「핵무기폐기협정(Nuclear Weapons Convention)」 협상을 조속 개시하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애썼다.

이에 대해 핵보유국들은 자국의 핵군축 의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국제 안보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위협하므로 단기간 내 핵무기를 폐기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최근의 「미-러 전략핵무기감축 신탁정(new START)」과 같은 다양한 핵무기 감축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비핵국들이 이러한 노력을 평가해 주고, 점진적인 핵군축이 불가피한 데 대한 이해를 가져줄 것을 설득하는 입장

이다.

나아가 자신들이 핵군축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비핵국들이 핵무기 불취득 공약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를 요청하고, 비핵국 가운데 이란과 북한의 핵확산 활동이 자신들의 핵군축 진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비확산 조치의 강화를 주장해 왔다.

이러한 핵군축과 핵비확산 간의 내재적 갈등 관계에 더하여, 아랍권에게는 초미의 현안인 이스라엘의 핵보유 문제와 ‘중동비핵지대’ 설치 문제가 과거 평가회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왔다.

아랍권은 1995년 NPT 평가회의에서 ‘중동 결의’ 채택에 성공한 것을 기초로, 금번 회의에서는 이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회의 참가 목표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등 강대국들이 중동비핵지대 설치 문제에 대한 아랍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는 한 금번 회의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NPT의 의의와 연혁, 평가회의의 과정 등 일반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2005년 NPT 평가회의 참가 후 <원자력산업> 2005년 7월호에 기고한 “제7차 NPT 평가회의의 결과와 향후 전망”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글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 아울러 동 기고문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외교통상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힌다.

지난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각국의 원자력 발전 도입 및 확대 정책을 배경으로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방권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핵비확산 조치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비동맹 측은 이것이 자신들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제약하는 구실로 악용된다고 저항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금번 평가회의에서는 핵군축도 중요하지만 평화적 핵이용을 다루는 3위원회가 회의의 성패를 결정 짓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대두되었다.

그러나 회의의 진행 과정을 보면, 결국 이번 회의도 핵군축 문제가 초점이 되고 중동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통적 평가회의의 틀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할



수 있으며, 평화적 핵이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IAEA가 일차적 책임 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회의 경과

평가회의는 관계적으로 4주에 걸쳐 진행되는데, 첫 주는 189개 당사국들의 수석대표로부터 자국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입장에 대한 기초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금번 회의의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듯 미국은 클린턴 국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파견하였으며, 여타국에서도 다수의 외교장관들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회의 전망을 밝게 했다.

이 정도 고위급에서의 회의 참석은 회의의 성과에 대한 각국의 강력한 공약을 상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금번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당사국들 사이에 확산시켰다.

또한 국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UN과 IAEA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과 아마노 사무총장으로부터 특별 연설을 청취했다.

첫 주는 공식적인 기초연설이 진행되는 이면에서 회의 의장단(전체회의 의장, 3개 위원회별 의장, 3개 보조 기구별 의장)이 주요국들과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숙의하는 데 활용되었다.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아래 3개 위원회별로 배정받은 평가회의의 현안 사항들에 대해 실제로 토의를 진행하고 협상하는 데 할애되었다.

- 1 위원회(Main Committee I: MCI): Chidyausiku 주유엔 짐바브웨 대사(비동맹 대표)
 - 핵군축, 소극적 안전 보장
- 2 위원회(Main Committee II: MCII): Yelchenko 주비엔나 우크라이나 대사(동구 대표)
 - 핵비확산, 안전 조치, 수출 통제, 비핵 지대
- 3 위원회(Main Committee: MCIII): Nakane 주비엔나 일본 대사(서방 대표)
 - 평화적 핵이용, 다자 핵연료주기

한편, 전체회의 의장(President of the Plenary)은 Cabactulan 주UAE 필리핀 대사가 비동맹을 대표하여 수임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산하에 보조 기구를 하나씩 설치하여 특정한 주요 사안에 대해 토의를 갖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

- 제1 보조기구(Subsidiary Body I): Marschik 오스트리아 대사
 - 핵군축에 관한 실질 조치 발굴
- 제2 보조기구(Subsidiary Body II): Kelly 아일랜드 대사
 - 중동 등 지역 문제 토의
- 제3 보조기구(Subsidiary Body III): Cancela 우루과이 대사
 - 조약 탈퇴 및 NPT 제도화 문제 토의

매일 3개 위원회 및 보조기구별 회의가 다층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둘째 주에는 세부 주제들에 대한 각국의 기본 입장을 청취한 후 금요일 경 위원회별 의장이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다.

주말 사이에 각국 검토를 거쳐 셋째 주에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위원회별 재토의가 진행되었으나 문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지막 넷째 주 월요일에도 위원회별 토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핵보유국들이 핵군축 관련 사안들에 대해 집단적, 공세적 태도를 취하여 다양한 수정안들을 내놓았으며, 일부 제안은 기존 핵군축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카박톨란 전체회의 의장이 화요일 새벽 회의 최종 문서 일차 초안을 회람한 후, 화요일 오후부터 토의가 속개되어 목요일까지 핵보유국과 비핵국간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5월 26일(수) 당사국들 앞으로 금번 회의의 성공이 긴요함을 강조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각국은 카박톨란 의장이 5월 27일(목) 저녁 회람한 최종문서안을 기초로 하여 회의 최종일인 5월 28일(금) 오후 마침내 최종문서에 합의하였다.

문서는 양측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한 결과, 핵심 사안인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어느 쪽의 견해도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문안으로 합의되었으나, 핵군축과 중동 문제에 있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핵보유국과 비핵국간 현격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평가회의가 합의문서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회의 운영상의 기교에 상당히 의존했다.

백 수십 개국이 발언하고 제안한 내용들을 보고서에 모두 담으려면, 즉 'rolling text'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행정상이나 시간적으로 합의가 매우 어려우므로, 위원회별 의장 또는 전체회의 의장의 직권하에 각국 제안들을 취사선택하여 문서를 수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5월 24일(월)의 회의처럼 핵보유국들이 공세적 제안들을 수없이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은 이를 입지 강화를 위한 전술적 조치로 보고 대부분의 제안을 다음날 회람한 수정 문건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역시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개진된 많은 제안들도 위원회 의장들이 회람한 수정 보고서에는 별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서 작성 테크닉에 힘입어 평가회의의 마지막 며칠은 전체회의 의장 보고서 초안에 담긴 내용 중, 핵보유국과 비핵국이 수용 가능한 부분과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분 간 담합과 주고받기를 거친 끝에 최종문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그간 8차례의 평가회의를 거치면서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각국이 모두 익숙해져 있으며, 5년마다 열리는 평가회의 중간에도 거의 매년 2주간에 걸친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회의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어온 데다, 사실상 1위원회에서 다루는 핵군축 문제는 제네바군축회의(CD: Committee on Disarmament)에서 계속 토의해 오고 있으며 2위원회의 핵비확산 및 안전 조치 문제와 3위원회의 평화적 핵이용 주제도 IAEA에서 상시적으로 토의해온 사안들이라 각국 전문가들 간에 무엇이 현안이고 쟁점인지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 있는 점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사실은 주요 사안들을 일차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네바와 비엔나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정치적 성격의 NPT 평가회의가 이들을 대신해 합의를 이루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문서(Final Document)의 의의와 내용

회의 마지막 날 오후 채택된 최종문서는 핵보유국과 비핵국(특히 비동맹) 간 현격한 입장차를 봉합한 타협의 산물이다. 이 문서는 크게 실질적 내용을 포함한 'Part I' 과 절차적 사항을 다룬 'Part II' 로 구분되는데, 핵심은 'Part I' 이다.

2000년 NPT 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금번 회의는 NPT 조항별 운용 또는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review part'), 아울러 향후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모색하는('forward-looking part')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최종문서의 'Part I' 은 조항별 운용 평가와 향후 조치 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과거 회의 때처럼, 핵보유국과 비핵국은 상대방의 핵군축 및 핵비확산 의무 이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상이한 견해를 피력하여 좀체 문안에 합의할 수 없었고, 결국 최종문서 첫 페이지 하단에 주석(footnote)을 달아, 조약 운용에 대한 평가는 전체회의 의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명기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았다("The review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and reflects to the best of his knowledge what transpired with regard to matters of review.").

양측은 다행히도 향후 조치 사항 부분에서 핵군축, 핵비확산, 평화적 핵이용 분야를 망라하여 총 64개항과 중동 문제와 관련한 다수의 조치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최종문서 채택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여타 주요 사안 - NPT 조약 탈퇴 문제 및 제도 개편 - 에 대한 합의는 상실되었다.

비동맹, 특히 아랍권이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1995년 중동결의 이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① 유엔 사무총장 등이 중동비핵시대 설치에 관한 중동 국제회의를 2012년 소집하고, ② 유엔 사무총장 등은 이



회의 준비 및 1995년 중동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를 역내 국가들과 협의하여 임명하며(최종문서 IV. 7), ③ ‘이스라엘’의 NPT 가입 및 IAEA 안전조치 수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최종문서 IV. 5) 문안에 당사국들이 합의함으로써 아랍권이 최종문서를 수용하는 기초가 되었다.

또한 비동맹은 핵보유국들이 다양한 실질 핵군축 조치에 “즉각 개입하고”(promptly engage with) 그 결과를 2014년 NPT 준비회의에 보고할 것과, 2015년 NPT 평가회의는 이를 평가하고 6조의 전면 이행을 위한 향후 조치들을 고려한다는 데 대해서도 핵보유국들의 동의를 받아냈다(최종문서Action 5).

이는 실질 핵군축 조치들에 대해 핵보유국간 ‘협의(consultation)’를 가진다는 당초 문안보다는 약화된 것으로 간주되나, 핵보유국들의 action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성과로 볼 수 있다.

핵보유국(특히 미국)은 중동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한 대신, 핵군축 분야에서 비핵국이 회의 전부터 강하게 주장해온 핵군축의 시한 설정, 핵무기 폐기 조약에 관한 교섭 개시, 핵폐기 검증 메커니즘 구축 요구를 저지하고 이에 관한 문안을 일반적이면서 애매한 표현으로 약화시킨 데 이어, 최우선 관심 사안인 핵비확산 분야에서 추가의정서 및 다자 핵 수출 통제 체제의 중요성 확인, 핵연료 공급보장 논의 지속 등에 대해 비핵국의 양해를 도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긴요한 최종문서 채택 및 평가회의의 성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종문서의 전문은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 게재시 까지 www.reachingcriticalwill.org에서 검색 가능)

주요 쟁점

가. 1 위원회

(1) 핵군축 일반

1 위원회의 핵군축 논의는 ‘핵군축 조치사항(nuclear disarmament action plan)’에 담길 내용을 둘러싸고, 2000년 NPT 평가회의의 최종문서 내용

보다 진전되고 실질적인 조치 사항들을 담아야 한다는 비핵국, 특히 비동맹과 NAC(New Agenda Coalition: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이집트, 아일랜드, 스웨덴 등 7개국 그룹) 측 주장과,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핵억지 정책이 필요하며 핵무기 감축 및 폐기는 현실적으로 국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핵보유국 주장이 크게 대립했다.

구체적으로, 비핵국은 ① 핵군축을 위한 분명한 시한(timeline) 설정(예: 2025년 제시), ② 핵무기폐기협정 협상을 위한 명확한 문안 삽입, ③ 핵군축을 감시하는 국제 메커니즘 구축, ④ 핵무기 보유 현황에 관한 투명하고 상세한 보고 체계 수립(transparency), ⑤ 핵분열 물질 생산 유예를 촉구하는 문안 삽입, ⑥ 핵무기 운용 태세 약화(de-alerting) 필요성, ⑦ 핵무기 관련 국제 인도법 준수 필요성, ⑧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조약 협상 개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핵보유국은 ① 핵군축은 국제 정세에 따르고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킬 수 없는 인위적인 시한 설정은 비효율적임, ② 핵군축 협상 시기는 예단할 수 없으며, ③ 야심찬 제안들을 할수록 더욱 비현실적으로 되므로, 이행할 수 없는 제안보다는 실용적,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 전술 핵무기 감축

독일은 전술 핵무기(tactical or sub-strategic nuclear weapons)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관련 문안이 보고서의 조치 사항(action plan)에서 누락되었다면서 이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동 제안국인 핀란드, 폴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이 이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① 전술 핵무기 관련 어떠한 토의도 모든 종류의 무기와 직접 연관이 있으며, ② 모든 핵무기와 부품의 원소유국에 반환, ③ 유럽내 핵무기 기초시설의 완전한 폐기, ④ 최근 탈린 개최 NATO 외교장관 성명상 NATO내에서 조차 전술 핵

무기 처리 방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우선 NATO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 ⑤ NATO의 전술핵은 순식간에 러시아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러시아 측에게는 전략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3) 핵무기 근대화 및 신형 핵무기 개발

프랑스는 핵무기 근대화는 핵무기 개발의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핵군축의 장애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고, 근대화 및 신형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핵실험 금지에 국한시키려는 의도에서 현 CTBT 조약 서문의 문안을 제시한 데 대해, 비동맹측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최종문서에서 관련 문안이 삭제되었다.

(4) 핵분열 물질 생산 유예

비동맹, 호주, 일본 등은 핵보유국의 핵분열 물질 생산 유예 선언 및 이행을 촉구하는 문안을 주장한 바, 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분열 물질을 생산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동 문안이 최종문서에서 삭제되었다.

나. 2 위원회

서방 측은 IAEA 안전 조치 체제에 있어 추가의정서가 갖는 유용성을 최종문서에서 인정하고 이를 원자력 물자 공급의 조건으로 삼을 것과, 개별 국가 및 다자 차원의 핵수출 통제 제도를 강화하고 NSG와 재거위원회 의 공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비동맹은 추가의정서는 1997년 IAEA 이사회에서 승인할 당시 각국이 자발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기로 한 사안이므로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NSG가 2000년 NPT 평가회의 합의 사항인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국에게만 원자력 물자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위반하여 2008년 9월 NPT 비당사국으로서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치 않은 인도에게 예외를 부여한 점에 비추어 NSG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최종문서의 조치 사항 부분에는 각국의 추가의정서 가입을 권고하고(encourage), 원자력 수출 통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문안은 유지하되 NSG에 대한 명시적 거명은 삭제되었다.

다. 3 위원회

비동맹은 핵연료 공급 보장에 대한 언급은 다자 핵연료주기 구축이라는 큰 틀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NPT 회의에서 핵연료 공급 보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회의 문서에는 아주 간략하게 언급만 할 것을 주장한 바, 서방 측은 핵연료 공급 보장 방안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며, 당사국들의 어떠한 평화적 핵이용 권리도 구속하지 않는다 하고 실질 토의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최종문서의 조치 사항에는 토의 계속 필요성을 언급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탈퇴 문제와 관련, 미국 등은 핵확산국이 탈퇴 조항을 악용하여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한 후 탈퇴할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한 탈퇴 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탈퇴 전 공급받은 핵물질과 장비는 탈퇴 후에는 반환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동맹은 핵군축과 안전 보장 등 NPT의 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당사국들의 권리인 탈퇴 문제에 과도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론을 제기함에 따라, 탈퇴 문제와 관련한 문안이 최종문서의 조치 사항에 반영되지 못했다.

NPT 제도화 문제를 오랫동안 주도해온 캐나다는 제도화 방안에 관한 작업 문서를 17개국 공동으로 회람하고, ① 의장 지원 그룹 설치, ② 연례 당사국 회의 개최, 탈퇴 등 경우에 대비한 긴급 회의 소집 방안 마련, ③ 소규모 사무국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수국이 캐나다 제안의 일부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사유로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 절차적, 구조적 개편을 한다고 해서 정치적 의미가 부족한데서 연유하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는 없으며, 소규모 사무국 설치도 당면한 현안으로부터 주의만 분산시킬 뿐 불요함

- 연례 당사국 회의 개최 등 회의의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

- 유엔 내 소규모 사무국 설치 및 일부 회의 보고서 감축 등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이나, 근본적으로 법적 측면, 예산 측면, 과정상의 의문이 있는 바, 의장 지원 그룹을 공식화하는 등 평가 과정을 전면 개편하는 데는 우려가 있으며, 회의의 정례화는 평가 과정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비용을 증대시킬 뿐이고, 긴급 회의 소집 문제는 NPT 8조에 규정 없어 법적 문제를 야기함

- 연례 회의는 실질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의문이며, 보다 중요한 사안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동진 토의 자체를 연기할 필요

향후 전망

NPT 당사국들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집권 후 미 핵무기 정책의 변화와 대러 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금번 회의에서 NPT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고 대체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금번 평가회의의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 핵보유국들은 각종 국제 포럼에서 핵비확산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IAEA 이사회에서는 다양한 핵연료 공급 보장 방안을 다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비핵국들의 협조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며, 작년 11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러시아 핵연료 비축안에 추가하여 IAEA 핵연료은행 설치 안건을 조만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안은 오바마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데다, 핵보유국들은 여러 유형의 핵연료 공급 보장 방안들이 중첩적으로 실현되면 비핵국에 대해 자체 농축, 재처리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명분이 강화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핵보유국들은 NSG에서 지난 수년간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농축, 재처리 장비 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집중

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뉴질랜드 개최 NSG 총회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이나, 향후 NSG의 실무회의를 통해 본건 합의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지난 4월 러시아와의 '전략핵무기감축 신탁정(new START)' 체결, 연이어 전향적인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제출,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개최 등 대외 안보 정책상의 주요 현안들을 잇달아 성사시킨 데 이어 금번 NPT 평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권위와 위신이 상승되었고, 이러한 대외 부문의 성과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국내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핵국들은 핵보유국들의 실질적, 구체적 핵군축 조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금번 회의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제네바 군축회의와 유엔 총회 계기에 핵보유국들에 대해 핵군축 공약 준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랍권은 금번 회의에서 1995년 중동결의 이행을 위한 주요 조치들을 약속받은 만큼 미국에 대해 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쳐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종문서에 이스라엘을 직접 거명하여 NPT 가입과 IAEA 안전조치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2012년 중동 비핵지대 회의 참여를 거부한다고 하고, 미국도 이스라엘을 거명한 것은 관련 합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종문서의 중동 관련 합의는 외교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금번 평가회의의 성공은 핵보유국과 비핵국 간 군축, 비확산 분야 전반에 걸쳐 상당 기간 대화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